



안원태 |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립공원위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선심(善心) 아닌 선정(善政)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여부 논란의 파란이 차츰 넓어지고 높아지는 느낌이다. 이 논란의 바닥에는 세 개의 미신(未信)이 틀고 앉았다. 첫째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선심행정이라는 정치성 발언과 주장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기 노림수로 해서 안 될 일을 꾀하고 있다는 비난이 담긴 주장이기도 한데 여니 때와 다른 것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식 제안 발표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안에 야당이 힘 잡고 나선 것이 아니라 여당의 제정 경제통이라는 일부 의원들과 정부 일각 특히 예산당국이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며 딴지걸고 여기에 정부 여당에 이해가 높은 일부 신문의 논조가 호응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정부가 국립공원을 만들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기보다는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경치 좋은 곳으로 본래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즐겨 찾던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여 당초에 무리가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본래 있던 경치 좋은 곳에서 국립공원의 이름값으로 입장료를 받는 나라는 없다. 아름다운 풍경

을 해칠 수 있는 야영장 주차장등 땅 모양 바꾸기의 원인 행위를 하는 야영객이나 차량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은 거의 공통이다.

OECD 국가 중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오직 하나뿐인 우리 나라가 세상 물질 아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데 무슨 다른 속내나 있는 냥 선심행정이라는 핑계로 비켜가려는 예산 당국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으나 몇천억원 씩 자르고 덧붙이는 해마다의 예산 조정을 보아온 터로는 겨우 300억원 안팎인 공원 입장료 폐지에 응하지 못하다니 뭘지 선진국의 상식을 받아 드리는데 너무 무감각 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의 혁신 의지로 모처럼 베풀려는 옳고 좋지만 한 선정(善政)을 가로막는 이상한 일부 여당과 예산 당국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두 번째의 미신(未信)은 사찰 입장료라 할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는 한 묶음이라는 미신이다. 이는 두 가지 요금을 함께 받고 있어서 생긴 미신인데 당치않은 일로 당연히 분리되어야 할 요금이다. 특히 사찰에는 들리지도 않고 문화재는 구경은커녕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찰 소유 땅을 밟고 지나니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라 우겨대는 데에는 불합리가 함께 한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시설에서도 문화재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처마 끝을 쳐다봤다가 나 땅을 밟았다고 요금을 받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름난 문화재나 박물관이 울안에 들어오거나 집안에 들어오면 요금을 받는 경우는 많다.

이제 우리도 세계의 상식을 받아드려서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가 있는 건물이나 울안에 들어서서 보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한다. 물론 요금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그럴만한 가치가 없으면 들릴 사람 없겠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는 전혀 다른 근거와 개념의 요금이므로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더라도 절 안에 들어오는 관람객에게는 알맞은 요금을 받아야 하고 만에 하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 못하더라도 국립공원 입장료는 공원 입구에서 받고 문화재 관람료는 절 앞에서 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도 선량한 중생들이 그렇거나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세계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격다짐과 억지로 밀어댄 암울했던 과거에 집착하는 미신을 지워 버리고 새 틀을 짜겠다는 혁신 과업이 아니겠는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한 세 번째의 미신은 국립공원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듣기 따라 그럴 듯하지만 당치 않은 얘기다. “수익자 부담”이란 국가 재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특별한 혜택을 입게 될 때에 절대 다수 국민과의 형평을 위해 그 혜택의 범위에서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생각이고 상식이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교육도 일부의 혜택이 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는 수업료와 공납금을 내야 했다. 모든 국민이 다들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지금은 그런 몰상식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립공원은 국가 재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국민이 즐겨 찾으니 국가가 국민의 안전 이용과 오래도록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일 년이면 철들고 활동력 지닌 인구의 대부분인 3000만명이 이용하는 데도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에서도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료화 해야 한다는 현대의 국민 복지 추구 이념에 비추워 보거나 흔히 주장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골프 코스를 일 주일 몇 번씩 찾을 수 있는 한 쪽에서 일주일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배낭에 김밥 물병 담고 쌓인 스트레스 조금이나마 털어 보려고 국립공원을 찾는 다른 한 쪽을 생각하여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

이제 복지 행정의 중요 시책으로 추슬러져야 한다. 골프장이나 해외 휴가 생각하며 국립공원 입장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먹이는 그런 생각 털어 내는 것이 혁신의 대상인 구태에 연연한 것 아닌가? 오늘의 잣대와 세계의 상식으로 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국립공원 입장료에 적용하려는 것은 흘러간 20세기 전반기의 케케묵은 고교급(高校級) 아니면 밀어붙여 시절의 관료적 논리다. 이 국립공원 입장료 도입 당시의 결정과정도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 더욱 그렇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복지 행정부문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과료사회의 전근대적 사고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가장 많은 국민님 박수를 모처럼 받게 될 터이다. 참고로 지방 선거에서는 구체적 지역의 일이 아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같은 선정의 결과로 표심이 움직이는 표 얻겠다는 노림수로 불가 하는 걱정이 진실 이라면 이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유치한 오관이며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일 뿐이다.